

#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제 2586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1일

발 의 자 : 서병완, 나상희, 박종호,  
이인락, 임준희, 임정옥,  
심광식, 오진환, 공기환,  
이재식, 정순희, 정택진,  
윤인숙, 유영주, 이수옥,  
최재란, 조진호,  
신상균 의원 (18명)

## 1. 주 문

별첨 “결의안”과 같음(결의안 첨부)

## 2.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뿐 아니라 환경·안전·방역과 관련된 예산 등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나.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방자치·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인상만을 담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음.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시행과 함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안정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및 정부에 촉구함.

3. 결의안 : 붙임

4. 이송처 : 국회, 국무조정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는 1987년 지방자치법 부활 이후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예산뿐 아니라 환경, 안전, 방역 관련 과제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계획에 없었던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하며, 지방세수 확대 등의 재정분권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 10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만을 담고 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은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내용이 빠져 있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의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2019년 중에 마련하

여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2단계 재정분권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초계획보다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용두사미’로 그치며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지방자치·자치분권은 시대적 화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여야 하며, 강력한 재정분권이 동반되어야 지방자치·자치분권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극복 및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조속히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하나, 국회 및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2021. 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